

“방위비분담금 우리 입장 전달 할 것”

여야 3당 원내대표 방미 “외교적 노력 견지”

美 상·하원, 정부 측 인사들과 연달아 면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일 공정한 주한 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한 우리의 의견을 미국 의회와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방글길에 오르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의 굳건한 정신에 기반해 의회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견지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로 미국 의회 측에 우리 국회와 정당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굳건한 정신에 기반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협상 과정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 방위비 협상이 파행됐는데 한미동맹이 최대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방위비 협상은 반드시 한미동맹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협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한미동맹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방위비 협상이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튼튼하면 우리의 국익뿐 아니라 미국 국익에도 매우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돌입해 매우 무거운 마음”이라며 “여러 외교안보의 어려운 부분을 국익을 위해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당 원내대표가 아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마음으로 의회 외교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경제적 이익이나 비용의 문제로 환산할 수 없다”면서 “과도한 미국의 요구가 자칫 한미동맹의 분열, 갈등을 일으키고 양국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반드시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미국 상하원 관계자들과 정부 측 인사들을 두루 만날 계획이다. 상원에서는 찰스 그래스리 임시의원장(공화당),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의 간사(공화당), 한국계이기도 한 앤디 김 군사위원회 의원 등을 만날 계획이다.

미국 정부 측 인사와도 면담한다. 이들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도 만나 미국 정부 측과도 함께 방위비 분담금에 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기 앞서 방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3당 원내대표는 미국 행정부 및 의회를 방문,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 측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무(민주당),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민주당),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간사(공화당), 한국계이기도 한 앤디 김 군사위원회 의원 등을 만날 예정이다.

상원에서는 찰스 그래스리 임시의원장(공화당)과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공화당)의 면담이 예정돼있다.

하원에서는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 총무(민주당),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민주당),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간사(공화당), 한국계이기도 한 앤디 김 군사위원회 의원 등을 만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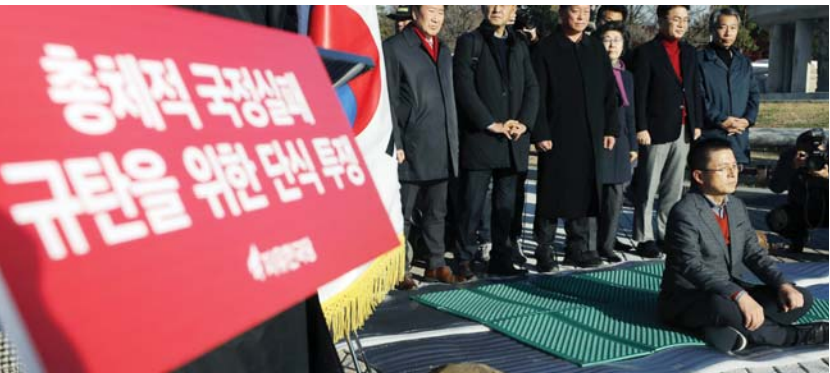
미국 정부 측 인사와도 면담한다. 이들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도 만나 미국 정부 측과도 함께 방위비 분담금에 대

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처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함께 방미에 올랐지만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한 상태다.

계다가 외교현안에 대한 시각차도 여전하다. 당장 나 원내대표는 이날 출국에 앞서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입장)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소미아 파기(입장)로 한일관계 문제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동맹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의 의회 외교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기한 단식 돌입 황교안 “죽기를 각오...기델 곳은 국민 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중로구 청와대 사형대 인근에서 지소미아 파기·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 등 철회,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따른 국정대전환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

해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말

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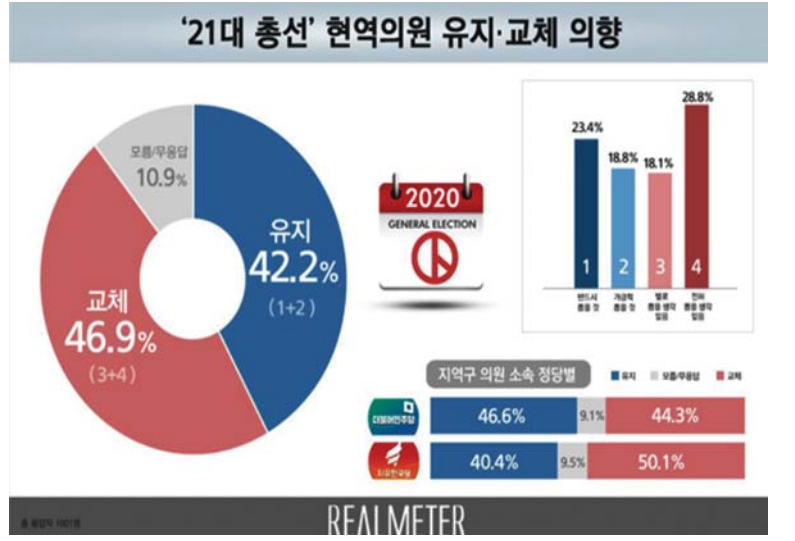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철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세 가지를 요구한다”며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운명·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것을 단식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와 공수처법·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처

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존립이 달린 일”이라며 “제 단식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단식이라는 점을 헤아려 달라. 야당이 기델 곳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밖에 없다”고 했다.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안보 정책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탈탈 털어 감옥에 넣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반대자들을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법이 공수처법”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재인 시대보다 더 못한 시대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의 이합집산법”이라며 “‘자신을 받들고 늘리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총선서 현역의원

‘교체’ 47% vs ‘유지’ 42%

오차범위 내 ‘교체’ 우세...한국당선 ‘교체’ 우세

내년 4·15 총선에서 현역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교체’와 ‘유지’ 여론이 팽팽한 반면, 자유한국당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교체’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20일 내놓은 ‘내년 총선에서의 현역의원 유지·교체’ 관련 여론조사(오마이뉴스 의뢰) 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 출마할 경우 그를 ‘교체’할 것이라는 응답은 46.9%로 집계됐다.

‘전혀 뽑을 생각 없음’은 28.8%, ‘별로 뽑을 생각 없음’은 18.1%로 각각 나타났다.

반대로 현재 지역구 의원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42.2%로 조사됐다. ‘교체’ 응답률이 ‘유지’보다 오차범위(±3.1%) 내에서 4.7%포인트 높았다.

‘반드시 뽑을 것’이라는 답변은 23.4%, ‘가급적 뽑을 것’이라는 답변은 18.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9%다.

민주당 현역의원의 경우 ‘교체’는 44.3%, ‘유지’는 46.6%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당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교체’ 여론이 절반인 50.1%로 조사됐다. ‘유지’ 한다는 여론은 40.4%다.

‘교체’ 여론은 △충청권, 경기·인천, 호남, 서울 △50대, 60대 이상, 30대 △남성 △중도층, 보수층 △한국당, 정의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다수로 집계됐다.

‘유지’ 여론은 △대구·경북(TK) △40대 △여성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절반에 이르게거나 다수였다. 부산·울산·경남(PK)과 20대에서는 ‘교체’와 ‘유지’ 여론이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065명에게 접촉해 최종 1001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으로 표집률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은 9.0%다.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5%) 및 무선(75%)·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지난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포인트

다. 뉴스1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